

제 4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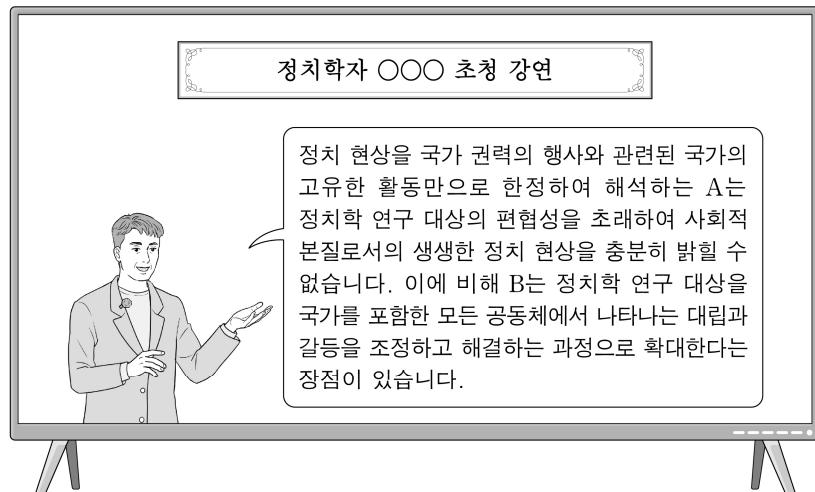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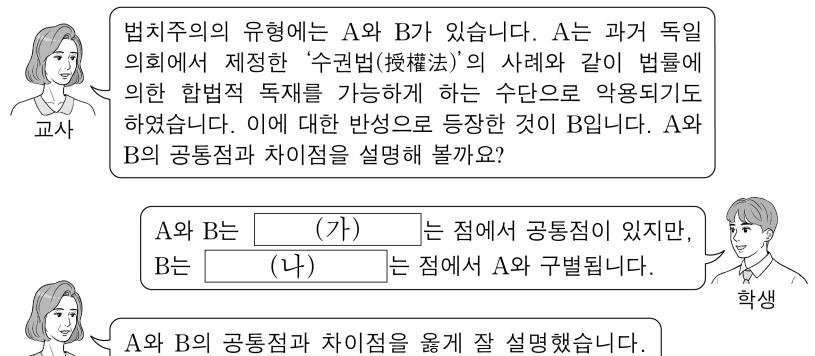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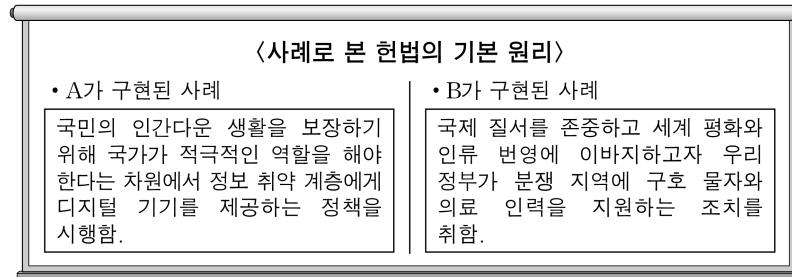
-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② B는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③ A와 달리 B는 정부의 재해 복구 지원금 집행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④ B와 달리 A는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A와 B 모두 학급 구성원이 체육 대회 단체복 디자인을 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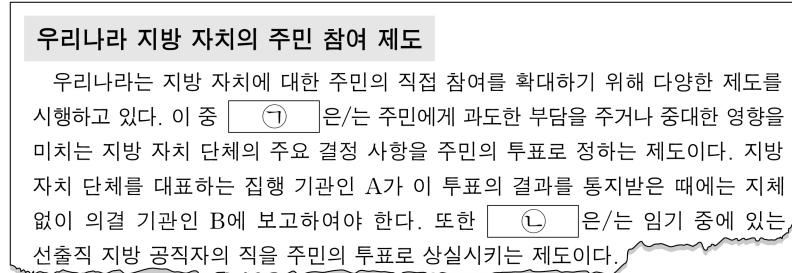
- ① A와 달리 B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통치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A와 B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 ④ (가)에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법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보다 절차적 합법성을 더욱 강조 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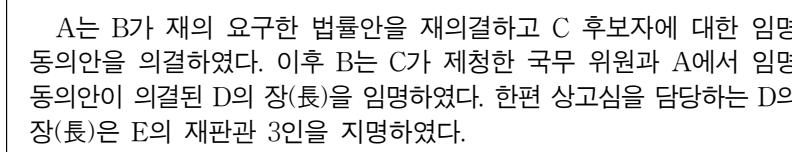
- ① A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창설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② B를 구현하기 위해 복수 정당제,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지도 원리이다.
- ④ B와 달리 A는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근거가 된다.
- 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은 B가 아닌 A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 ③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
- ④ B는 A가 제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은 '주민 소환', ㉡은 '주민 투표'이다.

5.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A의 제소에 따라 E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 ② B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C는 국무 회의의 의장이다.
- ③ A는 B에게 C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 ④ B는 D의 장(長)의 동의를 얻어 E의 장(長)을 임명한다.
- ⑤ D는 A와 B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한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범위에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만 포함시키고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긴급 재난 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 신청 처리 기준’이 난민 인정자의 A를 침해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헌법 재판소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①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 ②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다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④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⑤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더라도 제한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이다.

7.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A는 공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B, C의 제안을 검토하여 다가올 선거의 공약을 수립하려고 한다. 관련 산업 분야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B는 기업들이 공공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과학 기술 분야와 관련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C는 공공 데이터 공개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주장하였다.

- ① A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 ② A와 달리 B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C와 달리 B는 정책 결정 기구로서 정책을 집행한다.
- ④ A, B와 달리 C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 ⑤ B, C와 달리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여)과 을(남)은 법률혼 관계에서 A를 출산하였고, A가 6세 때 갑과 병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그후 갑과 병은 법률혼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1년 후 을은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갑과 병도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였다. 협의 이혼 당시 갑과 병은 A(14세)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갑과 이혼한 병은 정과 만나 법률혼을 하고, 병과 정은 지인의 자녀 B(19세)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하였다.

- ① 갑과 을의 이혼 당시 A에 대한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을의 사망 당시 A와 달리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③ 병의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법원으로부터 갑과 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때부터 인정된다.
- ④ 병과 정의 법률혼을 통해 정은 A의 친족이 된다.
- ⑤ 입양된 자녀 B에 대한 친권은 병과 정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이 소유한 복합 놀이 시설을 빌려 점유·운영하면서 시설 내 동물 체험장 개장을 위해 침팬지 체험장 및 침팬지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 계약을 병과 체결한 상태이다. 방학을 맞이하여 정(무의 법정 대리인)은 무(13세)와 함께 이 시설을 방문하였다. 오전에 무는 회전목마를 타던 중 벨트 잠금 장치 고장으로 회전목마에서 떨어져 종아리를 다쳤다. 그날 오후에는 갑의 직원 병이 아이들에게 침팬지를 만지도록 체험을 시켜 주던 중 병의 과실로 침팬지가 무의 얼굴을 할퀴어서 무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에 화가 난 무가 침팬지를 뒤에 둔 줄을 풀어 버렸고, 병의 과실로 열려 있었던 체험장 문밖으로 침팬지가 달아나 갑 소유의 침팬지를 잃어버렸다. 당시 무는 책임 능력이 있었다.

- ① 갑은 병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무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무에 대해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병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정은 무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갑에 대해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무는 갑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중 하나임.) [3점]

기후 변화로 인한 영해 기준선 변화로 북극해 연안국들은 A와 B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 대륙붕 경계를 확정할 것인지 갈등하고 있다. A를 우선시하는 국가들은 1982년에 채택된 국제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저의 지질·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륙붕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B를 우선시하는 국가들은 연안국의 영유권이 장기간의 반복적 관행을 통해 역사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 <보기>—————
- ㄱ. A는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A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다.
 - ㄷ. B의 예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다.
 - ㄹ. B는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국가의 동의 없이도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항공사들은 2008년경 약관을 개정하여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다. 이 약관에 의하여 마일리지가 소멸된 고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약관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A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얻는 이익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 이익의 불균형 정도는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①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②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 ③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④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 기관으로 다양한 심판을 담당한다. 이 중 A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른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B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A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헌법 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심판이다. C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 ① A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②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이나 규칙은 A의 대상이 아니다.
- ③ B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 ④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도 C의 청구권자이다.
- ⑤ B와 달리 C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회사 감사팀은 재무팀 소속 직원 갑이 수차례 회사의 공금을 몰래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여 갑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갑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검사는 갑을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갑과 검사 모두 항소 기간 내 항소하지 않았다.

- ① 검사는 갑의 구속에 대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기소 이전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1심 법원은 갑에게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하였다.
- ④ ○○ 회사는 갑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갑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1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30석으로 동일하며, 각국 유권자들은 각각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t 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였다. 갑국과 을국 모두 각 10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며,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각 국가 내에서 동일하였다.

t+1 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개편하였다.

- 갑국의 경우, 비례 대표 의석수를 2배로 늘리고 늘어난 비례 대표 의석수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함.
- 을국의 경우, 의회 의원 전체를 비례 대표 의원 선거만으로 선출함.

한편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서로 다르며, 이 중 ⑦한 국가가 정부 형태를 변경하여 t+1 시기에 두 국가의 정부 형태는 서로 같다. t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갑국이 C당 소속, 을국이 X당 소속이고 t+1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갑국이 A당 소속, 을국이 Y당 소속이다. 표는 t 시기와 t+1 시기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시기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분석>

구분	갑국			을국		
	A당	B당	C당	X당	Y당	Z당
t 시기	지역구 의석수(석)	10	4	6	5	3
	정당 투표 득표율(%)	60	20	20	40	50
t 시기 대비 t+1 시기	$\frac{1}{2}$	$\frac{1}{2}$	$\frac{1}{2}$	0	0	0
지역구 의석수의 비(比)						
t 시기 대비 t+1 시기	$\frac{3}{2}$	3	$\frac{5}{2}$	9	9	$\frac{3}{2}$
비례 대표 의석수의 비(比)						

* 의원 내각제인 경우, 각 시기에 최초 구성된 내각은 해당 시기 동안 변경 없이 지속되며, 단독 내각 성립이 가능하다면 연립 내각은 구성되지 않음.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각 시기 모두 갑국에는 A~C당만, 을국에는 X~Z당만 존재하고, 갑국과 을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없음.

14.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t 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 ② t+1 시기에 을국의 X당과 Z당의 의회 의석수의 합은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이다.
- ③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갑국의 A당과 달리 C당은 의회 의석률이 증가하였다.
- ④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을국은 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 ⑤ t+1 시기 을국 Y당의 의회 의석수는 t 시기 갑국 B당의 의회 의석수의 3배이다.

15.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t 시기에 을국의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ㄴ. ⑦이 갑국이라면, t+1 시기 을국에서는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
- ㄷ. ⑦이 을국이라면, t+1 시기에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 ㄹ. t+1 시기에 갑국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라면, t 시기와 t+1 시기 모두 을국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 |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갑, 을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범죄 성립 요건 중 어느 하나가 갖춰지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자신의 차를 부수고 도망가는 행인의 면상을 잡고 훈들어 전차 2주의 상해를 입힌 갑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경미한 접촉이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 술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을의 행위는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 ①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법질서 전 체의 관점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을의 행위는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행위는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⑤ 갑과 을 모두 법적 비난 가능성성이 인정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18세)은 중학교 후배 을(15세), 을의 동생 병(12세)과 함께 공공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같은 반 친구 정(18세)이 자리에 두고 간 최신식 스마트폰을 발견하였다. 갑, 을, 병은 함께 정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하고, 갑이 스마트폰을 절도하는 동안 을과 병은 정이 들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후 정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도서관 CCTV 확인 등의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였다.

<보기>

- ㄱ. 갑이 기소되면 정도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 ㄴ. 병과 달리 갑, 을은 모두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갑, 을, 병 모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사례 1]	노동 사건 자료집
A 회사 인사팀 소속이었던 근로자 갑은 회사 중요 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 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업무상 상사 지시 미이행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아 해고당했다. 갑은 이러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B 회사 제조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활발히 참여해 온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종무부로 사용자에 의해 전보되었다. 을은 이러한 전보 조치가 조합 활동 차단 목적이 있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는 인용되었다. 이에 사용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① 갑은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뿐 아니라 B 회사 노동조합도 을에 대한 전보 조치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 지방 노동 위원회와 달리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 ⑤ 중앙 노동 위원회와 달리 □□ 지방 노동 위원회는 을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을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7세)은 그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중고 게임기를 구입하려고 중고 물품 직거래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을(21세)이 작성한 '미개봉 게임기를 20만 원에 성년인 사람에게만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보았다. 당일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에게 나이를 20세로 위조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게임기를 2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갑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을은 갑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다음 날 오전에 갑은 을과 만나 자신의 용돈에서 2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게임기를 건네받았다. 그날 오후에 을은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기를 쳐서 계약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① 게임기 매매 계약은 갑이 게임기를 건네받은 시점에 성립하였다.
- ② 갑의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을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게임기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게임기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중 하나임.) [3점]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그해 11월에 A가 채택한 결의 제377호 '평화를 위한 단결'은 B가 국제 평화 유지에 한계를 드러낸 데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B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A가 즉각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회원국에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권고한 사례이다. 이는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가 B를 대신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보완적·예비적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보기>

- ㄱ.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A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 ㄴ. B에서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질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ㄷ. B와 달리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ㄹ. A와 B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 확인 사항

- 답변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